

# 내년 일자리 예산 최대치로 올린다

### 당정, 내년 재정 확장 운용 사회안전망 확충 도모 조기 집행위해 준비팀 가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

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

또 복지분야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을 200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郡)단위 LPG 배관망 지원 확대(2018년 3개군→2019년 7개군)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확대한다.

당정은 생계를 중단하고 임영훈련

(2박3일)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1만6,000원에서 내년 3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밖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정부안에 미편성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2018년 321억원→2019년 342억원)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예년과 다르게 당과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편성됐다"며 "예산 집행이 중요한데 올해 예산안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기획재정부내 점검팀이 가동 중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기 집행 될 수 있도록 준비팀도 기재부내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 태풍에 비상 걸린 국회 상임위·청문회 공식 취소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이 국회에도 미쳤다. 국회는 23일 예정된 각종 상임위 일정과 인사청문회 등을 공식적으로 취소했다. 이러한 조치는 태풍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2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의사일정 관련 합의사항'이란 제목의 공지를 통해 "정부가 태풍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 일정을 공식적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결산 의결 등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전체회의와 소위 일정은 간사 간 협의로 자율적으로 판단해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까지 상임위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예정이었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국회는 전날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중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먼저 이석하게 했으며 이날 오전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백운규 산자부 장관의 출석을 차관 출석으로 대체토록 했다.

한편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에서는 주민 1명이 실종되고 대규모 정전사고 발생, 항공 결항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뉴시스



태풍 솔릭의 예상경로 설명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홍진 기상청차장이 태풍 솔릭의 예상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김제 백구·용지면, 공모사업 선정 눈앞

### 김중희 의원, 농림부 이달 중 발표... 확정 시 각 40억원 지원

면 단위 별 40억원씩 지원하는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국회 김중희의원(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제-부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달 중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을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지역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테마를 살려 경쟁력을 갖춘 기초생활 거점으로 면 소재지를 키우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지역으로 선정되면 40억원의 국도비(국비 28억원,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를 지원 받는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을 신청한 백구면과 용지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다했다"면서 "지원되는 국도비로 문화센터·다목적광장·농약전수관 등을 조성하거나 건립하고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병행한다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양승태 행정처' 검찰 수사기록 유출 정황 포착... 압수수색키로

### 신광렬 판사 영장은 기각 검찰 "동일한 혐의 영장"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행정처가 영장에 포함된 수사 기록을 빼낸 정황을 잡고 현지 판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23일 오전 나모 전 서부지법 기획법관의 현재 사무실인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전 서부지법 직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법원 집행관들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부지검은 집행관들이 2008~2016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등에 포함된 정보를 빼내 행정처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근무 이전 2014~2015년 행정처 기획 1심의관을 지냈다.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전 서부지법 직원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직원과 나 부장판사를 불러 관련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 기록 누설 정황이 포착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여러명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조비리에 연루된 최유정·김수찬 전 판사,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에게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빼내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중요사건 보고 결재라인은 주무과관, 국장, 형사수석부장, 법원장"이라며 "결재 담당자인 형사수석부장도 필요한 경우 보고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영장을 심사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 부장판사가 임종현에게 송부한 범죄 혐의 관련 보고서를 취득해 가지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해 그 이상의 어떠한 증거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의 진술 등에 의한 소명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신 부장판사가 임종현에게 영장전담관사들을 통해 지득한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의 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 "혐의사실 입증에 위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개인성이 부족하다" 등 이유도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 부장판사와 사실상 동일한 혐의의 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라며 "신 부장판사뿐 아니라 나 부장판사의 임종현에 대한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확보된 상태이므로 영장기각은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 강경화 "남북 경험, 한미 인식차 있지만 좁혀나가려 설득"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남북 경험과 관련 "미국 측과 인식의 차가 있지만 좁혀나가기 위해 설득,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북 경험과 관련해 미국에서 속도 조절을 공식 요구받거나 이견이 있는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받은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 고위 관리의 언급이 있었다면 공식 요구라고 봐야 한다. 백악관 보좌관이나 이주국장 또는 국무부 한국과장, 부차관보 등이 언급했을 것인데 어느 수준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내용이 상당히 폭넓고 깊은 수준이다.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미국이 속도조절 필요성을 발원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인식 차를 좁히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